

정호영 'BBK특검호' 순항할까

주요 참고인 강제 소환 못해 수사 한계

李당선인 소환·김경준씨 대질 여부 최대 관심

특검보 합류 꺼려 수사팀 구성 원활할지 의문

헌법재판소가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직접 수사 타깃으로 하는 이른바 '이명박 특검법'의 동행명령제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난 7일 임명된 정호영 특검은 일단 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당선인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풀어줄 열쇠를 쥐고 있는 주요 참고인이 소환조사에 불응할 경우 이들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어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바람 안고 출항하는 'BBK 특검'** =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은 ▲이 당선인과 김경준씨가 LKe뱅크·BBK투자자문·옵세넬벤처스 등을 통해 행한 추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과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 세탁 사건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서울 도곡동 땅 5채(이하 '5채') 지분 주주와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시장 이던 2002년 한 부동산 업체에 외국 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 어센터(DMC) 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검찰의 피의자 회유·협박 등 편파·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관련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자된 사건 등이다.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돼 14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경준씨를 제외하고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딱히 '피

의자 신분'인 인물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15일부터 40일간 이들의 의혹을 모두 속시원하게 파헤치기 위해서는 '참고인 신분'의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대통합민주신당 등도 특검법안을 발의하면서 영장을 받아 강제소환할 대상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검 수사팀에 참고인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부여하는 조항을 넣었던 것. 그러나 현재가 이 조항에 대해서만 위헌 판정을 함에 따라 수사팀은 가장 중요한 '수사 수단'을 잃어버린 셈이 됐다. 특히 서울 도곡동 땅과 5채의 소유주인 이 당선인의 만형 이 상은씨와 이 당선인의 처남 김재정씨, 그리고 이 당선인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 등 의혹 해소의 열쇠를 가진 핵심 인물들이 위헌 소송을 냈던 점을 고려하면 이들이 수사에 적극 응할지 미지수다.

◇**수사팀 구성·수사 기간도 '결림'** = 지난 7일 임명된 정 특검은 14일까지 특별검사보 추천 등 수사팀 구

성과 수사 공간 확보 등을 끝내고 15일부터 당장 수사에 착수해 30일 이내에 일단락한 뒤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차례에 한해 수사 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레바야 수사 기간은 최장 40일이다.

정 특검은 조만간 10명의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5명을 지명받고 나머지 수사인 선출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선·후배나 동료 검사를 조사해야 하는 특검보나 수사팀에 전·현직 검사들이 합류하기를 꺼릴 게 분명해 수사팀 구성이 원활하게 될지도 의문이다.

◇이 당선인 소환 여부 '최대 관심'

'수사 결과는 물론 이 당선인 소환 및 김경준씨와의 대질조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이자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부분을 뺀 특검 수사 대상이 대부분 이 당선인을 '잠정 피의자'로 하고 있어 본인이 직접 조사하지 않는다면 정치권과 국민이 수사 결과를 끈기있게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도 크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 반응 = 이 당선인은 'BBK 특검법'이 일부만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후호영 당선인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당선인이 현재 결정을 보고받고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해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검보 인선 오늘 마무리"

정호영 특검 "15일부터 수사 시작할 것"

'BBK 추가조작' 등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할 정호영 특별검사는 10일 "가급적 11일 오전까지 대통령에게 임명 추천할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하고 15일부터 수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정 특검은 "특검보 후보를 10명 추천해야 하는데 판사·검사 출신 각 1명과 변호사 2명 등 4명만 확정된 상태"라며 "특검보가 선정되면 수사 대상 사건별로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배치해 검찰 수사 자료를 집중 검토하는 등 최선을 다해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지난 7일 임명된 뒤) 그동안 특검보 인선에 집중해왔으나 시간이 촉박함에도 적임자를 찾기도 쉽지 않고 찾아냈어도 본인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다. 특검 사무실 마련도 잘 돼 가는 듯 하다가 조금 전 임대가 다시 어렵다고 해 난관에 봉착하는 등 미확정적이다"라고 말해 수사팀 구성이나 공간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당선인 소환조사 여부와 관



10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에 대해 이강국 현재 소장이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목영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김희욱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훈 재판관, 송두환 재판관. (사진공동취재단)

SOC 제외한 32개 사업 재원조달 여부 성패 갈라

■ 서남권 발전계획 확정 의미·전망

10일 서남권 등 낙후지역 투자촉진 추진위원회가 확정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목포·무안·신안 등 전남 서남권의 미래 비전을 담은 초대형 프로젝트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동안 이들 지역에 인구 60만명 규모의 자족형 중핵 도시화를 이룬다는 발전 계획으로 서남권 발전사업 32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12개 등 총 44개 사업에 24조6천억원을 투입한다.

하지만 SOC사업을 제외한 복합관광 등 서남권종합개발에 투입될 예산 가운데 90% 이상을 민자로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투자 인센티브를 민간에 제공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어디에 투자되나 = 정부는 이날 전체 예산 24조6천억원 가운데 15조1천억원을 정부재정으로 지원하고, 민자 9조2천억원과 지방비 3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복합관광 분야에서 목포권 문화·관광 기반조성(1천466억원), 건강휴양 종합테마파크 조성(7천490억원), 다도해 해양관광 복합레저단지(1조689억원) 등 6개 사업을 진행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1천546억원), 조류발전단지 조성(1조9천814억원) 등 5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지역특화산업 분야에서는 중소형 선박 조선타운 조성(9천500억원),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303억원) 등 13개 사업을 추진해 서남권을 조선·세라믹·농수산물 특화단지로 탈바꿈시킨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물류거점의 경우 대불자유무역지역 조기 조성(536억원), 한중국제산업단지 조성(1조4천400억원), 신안 섬지역 연도·연륙교 건설(2조4천663억원) 등 7개 사업이 포함됐다.

SOC 사업으로는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237억원), 목포신항 개발(6천969억원), 호남고속철도 건설(10조3천834억원), 흑산 일주도로 확포장(10억원), 죽교~고하 목포대교 건설(2천290억원) 등 12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별법으로 뒷받침=전남도는 "올해 이들 사업 가운데 33개 사업에 4천490억원의 사업비가 정부 예산이 반영돼 사업추진이 속도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SOC를 제외한 32개 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들 사업에 들어갈 9조2천억원 가운데 91%인 8조3천억원을 민간자본으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낙후지역 발전투자촉진특별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의결하도록 해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 등 총선을 앞둔 정치적 법안이 많아 순조롭게 통과될지 아직 미지수다.

조세나 부담금 감면 등을 담은 특별법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민간투자를 끌어낼지도 알 수 없고, 새 정권의 이 계획에 대한 의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서남권종합발전계획 최종 확정으로 낙후지역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이라는 기본틀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특별법 국회통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최선을 다해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9조2천억중 91% 민간자본으로 채워야
낙후지역 특별법 내달 통과될 지 미지수

TECHNICAL SKI & GOLF WEAR **GOLDWIN**

골드윈 겨울 신상품 20% SALE

고기능 골프웨어와 스웨덴 팀복으로 유명한 골드윈이 새해를 맞이하여 겨울 신상품 세일을 실시합니다. 최고의 기능성과 세계적인 명성을 보다 저렴하게 만나보십시오.



<p>골드윈 광주 북문점 (062)614-2200</p>	<p>골드윈 순천점 (061)723-7715</p>	<p>골드윈 전주점 (063)287-7445 (골프)</p>	<p>골드윈 고객센터 전화번호: 061774-1000 E-MAIL: 061774-1000</p>
---------------------------------	------------------------------	-----------------------------------	---

TEL : 102040-1157 인터넷 판매 : www.goldwinreport.co.kr